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4% 더 오르면 '1만원 시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놓고 더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으로 201만580원이며, 올해(191만440원)보다 9만14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1%)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5% 인상을 결정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달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 5월에는 5.4%를 기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한국은행은 4.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를 제시했다. 정부는



박진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0% 인상... 월급 환산시 201만580원 물가 상승이 주요인, 노동계·경영계 간 대립 예상

연간 물가 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는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거부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하반기 추가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인상을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인상을 요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1~2년차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 악화 사정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한계 주장

도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어떤 쪽으로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힘입어 초반 2년 간 두 자릿수 인상을 달성했지만,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후 2년 간 인상 폭이 대폭 낮아지면서 결국 마지막 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공약한 바는 없지만 친기업 성향을 보여왔던 터라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실현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5% 인상률로 결론났기 때문에 향후 인상을 여력에 적극적인 태세로 나설 전망이다.

물가 상승 국면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이 내년에 한 차례 더 5% 인상을 오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 돼 1만원을 넘게 된다. 올해(9260원)보다 4%만 인상해도 1만4원이 된다. /뉴시스



“도지사 취임식 일정에 대해” 이정현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취임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인사권 없는 식물 검찰총장 우려 현실”

전반기 법사위 소속 민주 의원들, 한동훈 검찰 인사 관련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식 인가된 가운데 700명가량의 검찰 인사를 발표하는 데 대해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 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됐다”며 “앞서 한 장관이 이성운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할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고 위급 검사가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피고인인 손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공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간다. 하지

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지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저 기간에 앞으로 제정,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어 검사의 보직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이라며 “검찰총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 반복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권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직접 말했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던데 이제 검찰총장을 있으면서도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민주, 협치 위해 기득권 내려놓아야’

제12대 도의회 소수정당 당선인들 “부의장·상임위원장 출마 선언”

전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수진 진보당 오은미, 정의당 오현숙 등 소수정당 당선인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부의장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상임위 배석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전체 40석 중 37석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 3석은 국민의힘 이수진, 진보당 오은미,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이수진 당선인은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주를 제외한 전북의 모든 지역에서 소멸 대상 지역이며, 도민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회는 일개 정당이 아니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전북도민을 구해내겠다”고 말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들에게 심판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민심의 목소리에는 어긋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완벽한 기득권 카르텔 구조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도민이 주신 도의회 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12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할 것이며, 자신은 8년 동안 농산업경제위에 몸담은 전술가이고, 전북도의회와 환골탈태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은 민주당이 조례에 없는 조항을 들먹이며 소수정당의 상임위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당선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라북도 기본조례 제28조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이고, 제35조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임위에 비교해서 1명만을 의정이 선임하는 조항은 없고, 소수정당 의원을 비교해서 표현



오은미·이수진·오현숙 전북도의원 당선인(사진 왼쪽부터)이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하며 1명만을 배정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며, 조례를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조례에 따른 올바른 집행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농산업경제위원회 선임을 요구했다. /김경수기자

또한 오 당선인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배정에 대한 항의 시위 등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민주 “의장 선출 7월 4일로 연기”... 단독 원구성서 선회

1일 본회의 안건과 주말동안 여야간 추가 협상 시사

국힘에 “국회 파행 이끌어간다면 4일 선출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초 7월 입시국회 소집 첫날인 7월 1일로 예정됐던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주인 4일로 미루기로 했다.

박종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원내 7월부터 입시국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소집돼있는 상황인데, 이를(늦춰서)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거부하자 7월 1일부로 입시국회를 소집하고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일 것을 시사했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주말동안 여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안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의총에서) 내가 먼저 제안했다”며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 사이에 실패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 그렇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사개특위 재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며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당내 일각에서 조건없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일부 의원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 오히려 양보한 민주당을 향해 말장난, 언어유희와 같은 공격성 발언만 내놓고 있다”며 “이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식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면 우리도 월요일(4일)에는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김종인,尹·與 지지를 하락에 “보통 심각한 상황 아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와 국민의힘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과 관련해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단을 빨리 해서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느 여론조사기관 발표를 보면 지금 지지도가 49%밖에 되지 않고 부정적인 게 50%가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출범한 지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제9대 군산시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시의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균형발전도지 참배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 사무국 직원 소개, 군산시의회 일반 현황 및 회기 운영 안내 등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성우 의회사무국장은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며 “제9대 의회가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헌신적으로 숨은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산=김광근 기자